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 목 차

---

## ■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Executive Summary .....	i
1. 시작된 생산성 논란 .....	1
2. 일본의 생산성 논란 배경 .....	2
3. 시사점 .....	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 ■ 시작된 생산성 논란

지난 2017년 11월 1일 4차 아베내각 출범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생산성 논란이 촉발되었다. 당일 아베총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생산성혁명과 인재만들기혁명이라는 2가지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2조 엔 규모의 재정을 편성하여 가능한 정책부터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부터는 3% 이상씩의 임금 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베총리의 생산성 논란 촉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성 논란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일본의 생산성 논란 배경

아베총리가 생산성 논란을 촉발시킨 배경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자본은 물론 노동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2009년 0.0%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차 아베내각(2012년 12월 26일~2014년 12월 24일, 이하 동일) 집권 이후 2013~2016년까지 4년간 평균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기간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약 0%p, 약 1%p에 그친데 반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약 0.8%p였다.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명목 기준 2015년 4,538.3엔으로 2차 아베내각 집권 후 2013~2015년 사이 2% 초반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상승률도 1%대 후반에 그쳤다. **향후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하여 아베노믹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아베노믹스는 금융·통화 완화, 재정 투입, 성장전략 추진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환율 하락 및 주가 상승→기업 수익 개선→투자 및 고용 확대→임금 및 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 및 생산 증대→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유도하여 디플레에서 탈출, 일본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본경제재생전략이다.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경과를 살펴보면 선순환 고리**

가 투자와 고용 확대까지는 순조롭게 왔으나, 이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율과 주가는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에 비해 2017년 12월에는 35.2% 상승했고, 닛케이 주가는 동기간 월말 기준 120%나 상승했다. 전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 경상이익도 과거 최고 수준을 갱신했고, 설비투자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실업률은 최근 2%대까지 하락했고, 유효구인배율과 신규구인배율도 각각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현금급여총액과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여전히 2%대 미만 수준이고 가계소비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상승률은 0%대로 디플레 탈출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아베노믹스가 피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투자 및 고용 확대에서 멈춰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은 물론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OECD 평균 47.0달러에 비해 5.4달러(약 11.5%) 낮은 수준이다. 이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6달러(對 이탈리아, 12.6%), 많게는 22.7달러(對 미국, 34.3%)나 낮은 수준이다.

#### ■ 시사점

4차 아베내각이 생산성혁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형성 중인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고 디플레 탈출은 더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폴리시믹스를 참고하여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소득 및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단기,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이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단기 대중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사회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은 물론 법·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정착시키는 것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셋째,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과 후생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 등으로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여, 정책 실기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넷째, 노동 투입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과의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

## 1. 시작된 생산성 논란

○ 지난 2017년 11월 1일 4차 아베내각<sup>1)</sup> 출범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생산성 논란이 촉발됨

### - 2017년 11월 1일 4차 아베내각 경제운영 방향 발표

- 4차 아베내각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생산성혁명과 인재만들기혁명이라는 2가지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
- 이를 위해 2조 엔 규모의 재정을 편성하여 가능한 정책부터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각료들에게 지시

### - 생산성혁명을 위한 주요 지원 강화 방침도 제시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노즈쿠리라 불리는 제조부문에 대한 보조금 등의 확충은 물론 임금 인상과 인적자본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이외에도 임금 인상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설비 및 R&D 투자 확대,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생산성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지도록 세제 조치를 마련
- 이외에도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하여 관련 규제없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규제나 국가전략특구 내 지역한정관 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 특히, 4차 산업관련 산업이나 의료·간병 등과 관련된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 이를 통해 현재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 투자는 2020년까지 10% 증가시킬 계획

- 아울러 2018년도 이후부터 3% 이상씩의 임금 상승률 달성할 계획

○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생산성 논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1차 아베내각은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2차 아베내각은 2012년 12월 26일~2014년 12월 24일, 3차 아베내각은 2014년 12월 24일~2017년 11월 1일까지였음.

## 2. 일본의 생산성 논란 배경

### 1) 노동력 부족 보완

○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자본은 물론 노동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개선 또한 지연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이라는 3대 투입소의 개선이 필요하나,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총요소생산성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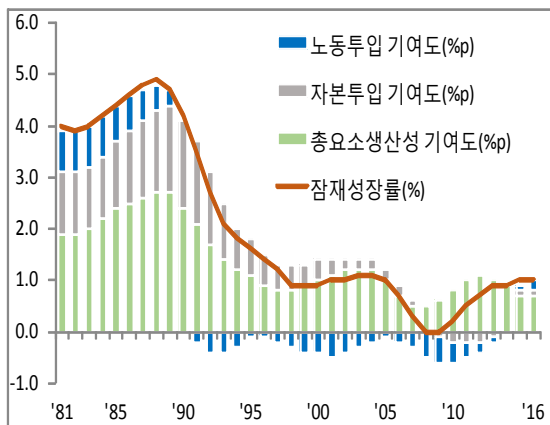
· 2009년 0.0%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차 아베내각 집권 이후 2013~2016년까지 4년간 평균 약 1%에 불과한 수준

· 동기간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약 0%p, 약 1%p에 그친데 반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약 0.8%p였음

- 노동투입의 개선이 어렵다면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이 또한 정체되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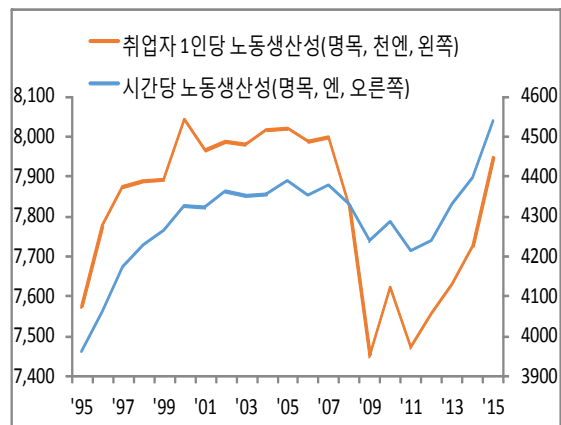
· 일본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명목 기준 2015년 4,538.3엔으로 2차 아베내각 집권 후 2013~2015년 사이 단순평균 2.3% 상승,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동 1.7% 상승하는데 그침

< 일본의 잠재성장률 및 각 부문별 성장기여도 >



자료 : 日本 内閣府.

< 일본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추이 >



자료 : 日本生産性本部.

○ 향후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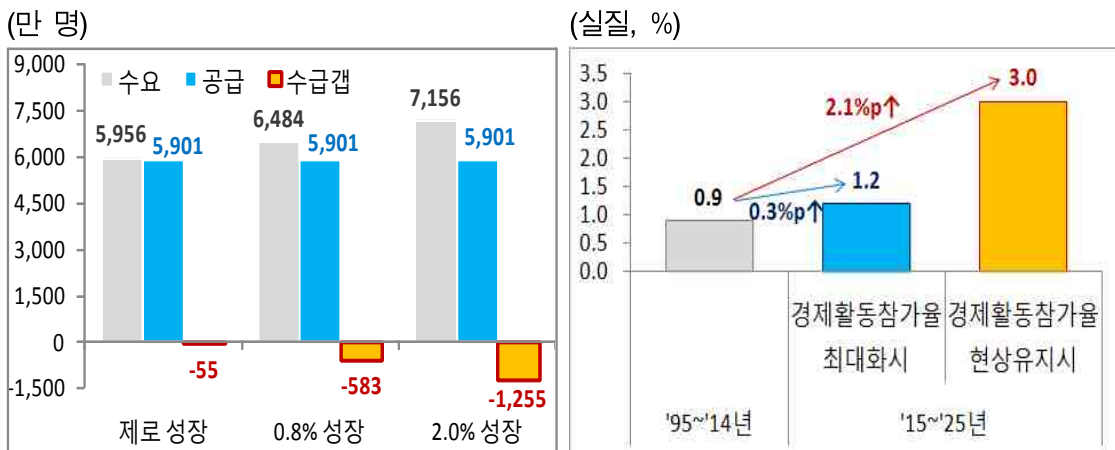
-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 파소르총합연구소(パーソル総合研究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일본의 노동력 부족 규모는 제로 성장일 경우 55만 명, 0.8%(현재 수준 유지) 성장일 때 583만 명, 2.0% 성장일 때 1,2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개선 필요2)

- 2016~2025년까지 최근 일본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0.8%정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화할 경우 0.3%p의 추가 노동생산성 개선 필요
- 만약 경제활동참가율이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면 0.8%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1%p의 추가적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재 일본의 여건임

< 일본의 노동력 부족 규모(2025년) >      < 일본의 잠재성장률(0.8%) 유지를 위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 >



자료 : 퍼솔총합연구소, 「労働市場の未来推計—2025年、このままいくと何万人足りなくなるのか?」 2016年 6月 17日 & 「136万人が働き手が変わる 'サテライトオフィス2.0' の提言」、HITO Report 特別号Vol2、2017年 8月.  
 주 : 추정 기간은 2015~2025년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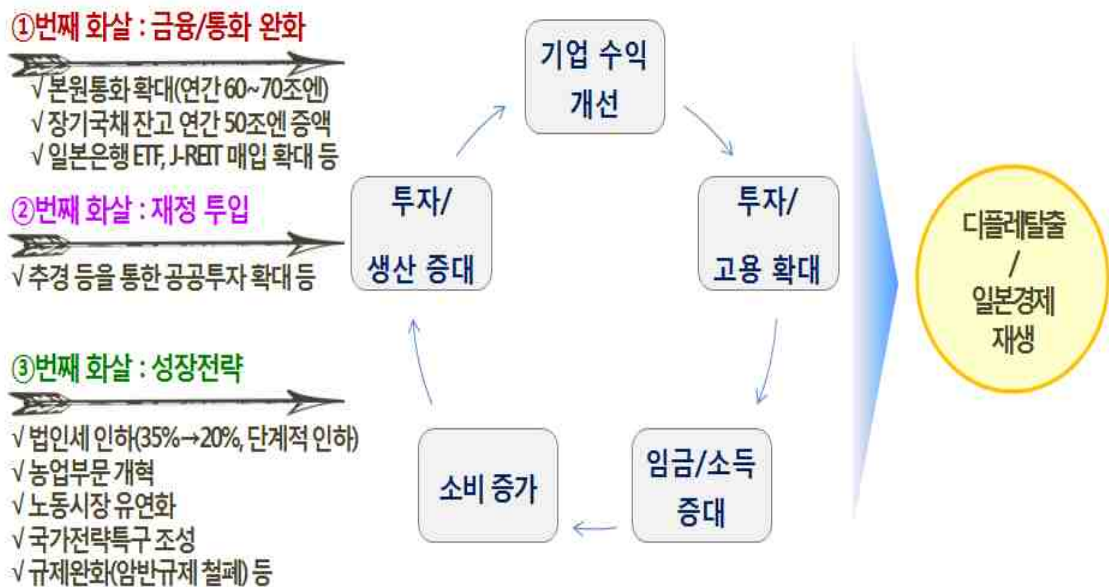
2) 퍼솔총합연구소, 「労働市場の未来推計—2025年、このままいくと何万人足りなくなるのか?」 2016年 6月 17日 & 「136万人が働き手が変わる 'サテライトオフィス2.0' の提言」、HITO Report 特別号Vol2、2017年 8月.

2) 경제의 선순환 고리 완성

○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을 이용한 디플레 탈출이라는 일본경제재생전략으로 야심차게 출발

- 아베노믹스는 금융·통화완화, 재정 투입, 성장전략 추진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
  - 첫 번째 화살은 본원통화 확대, 제로금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통화를 완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엔저와 주가 상승을 유도
  - 두 번째 화살은 추경 등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를 개선
  - 세 번째 화살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농업부문을 개혁하는 한편 국가전략특구를 조성하고 암반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
  - 이를 통해 기업 수익 개선→투자·고용 확대→임금·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유도
  -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에서 탈출하여 일본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전략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과 기대효과 >



자료 : 日本內閣府, 日本銀行 등의 자료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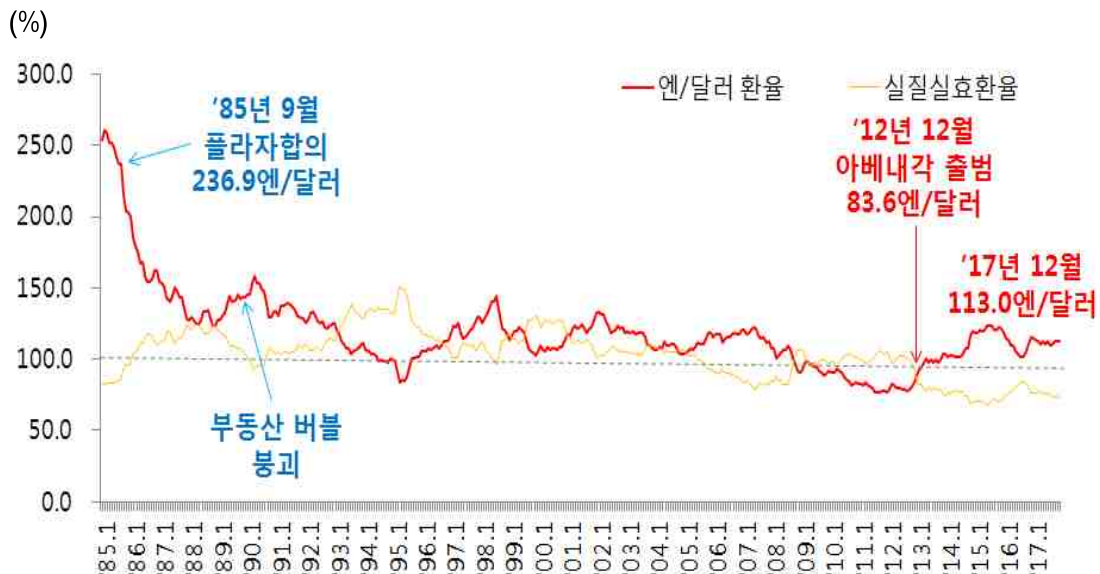


○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경과를 살펴보면 투자와 고용 확대까지의 고리 형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환율 및 주가 상승

- 엔/달러 환율은 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월평균 83.6엔/달러에서 2017년 12월 113.0엔/달러로 35.2% 상승
- 닛케이주가는 동기간 월말 기준 1만 395.18엔에서 2만 2,764.94엔으로 120% 상승<sup>3)</sup>

< 일본의 월평균 엔/달러 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 기업 수익성 개선 및 투자 증가

- 2016년도 일본 전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 경상이익은 75.0조 엔으로 과거 최고 수준을 갱신
- 동 설비투자 규모는 42.9조 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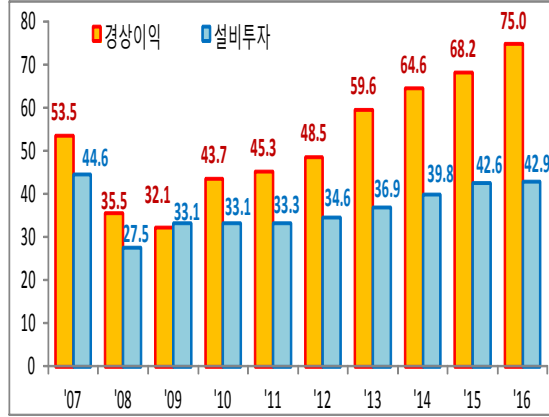
- 고용 확대 속 청년 구인난 심화

- 실업률은 2차 아베내각 출범 시 4.2%에서 최근 2%대 하락
- 같은 기간 유효구인배율과 신규구인배율이 각각 2배 수준으로 상승<sup>4)</sup>

3) Bloomberg 참조.

< 일본 전산업 경상이익 및 설비투자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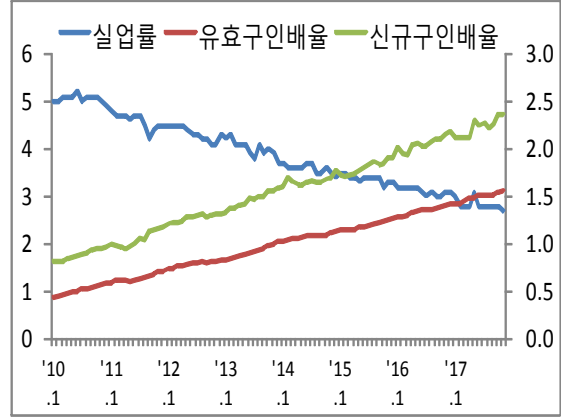
(조 엔)



자료 : 日本 財務省.

< 일본의 실업률, 구인배율 추이 >

(계절조정 %, 배, 실업률 좌측, 이외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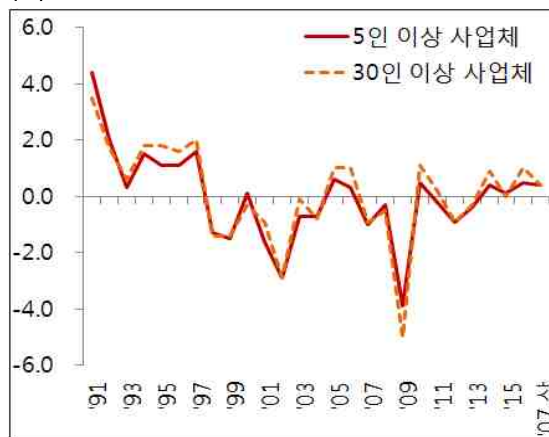
자료 : 日本 總務省, 厚生労働省.  
주 : 구인배율은 신규졸업자는 제외하고 파트타이머는 포함.

- 임금과 소득 및 소비 개선세는 여전히 미흡

- 일본 근로자들의 현금급여총액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2%대 미만 수준
- 가계소비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 일본 현금급여총액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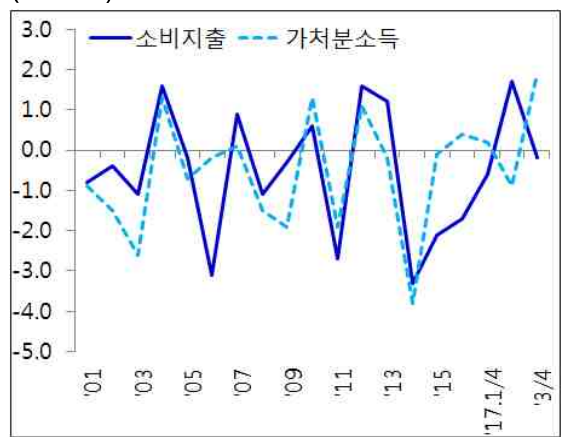
(%)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 일본가계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

(실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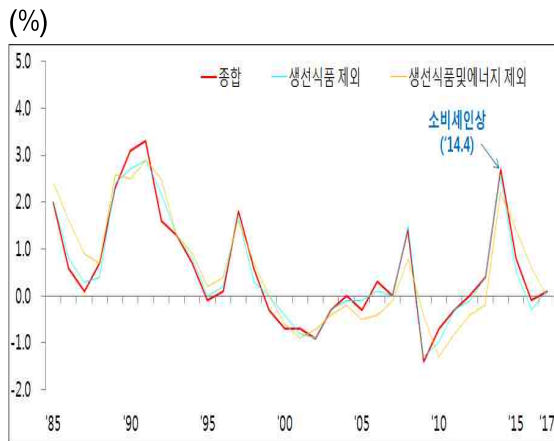


자료 : 日本 總務省.  
주 : 2인 이상 근로자가구.

4) 최근 일본에서는 청년구인난으로 오와하라(オワハラ)라는 신조어 유행. 오와하라는 끝내라는 의미의 오와레(終れ)와 괴롭임을 뜻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의 합성어로 신규 예비대졸자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채용조건으로 일절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거는 현상을 지적한 신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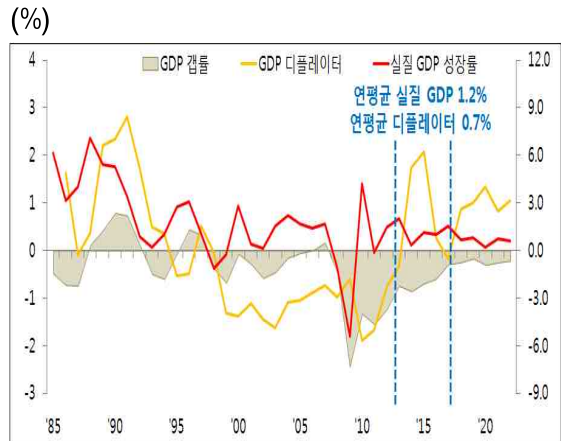
-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0%에 가까워 디플레 탈출에는 미흡한 수준
  -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 이후 급락,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음
  -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도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디플레 탈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日本 總務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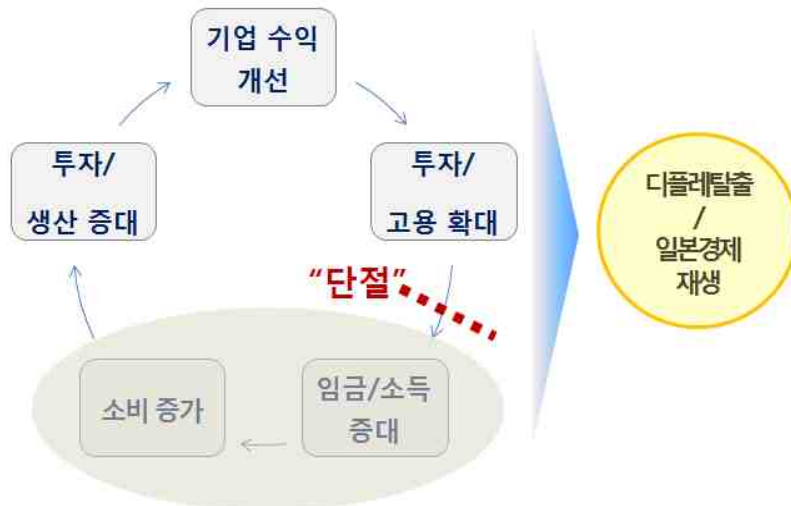
<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 추이 >



자료 : IMF.

- 결국, 아베노믹스가 피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아직도 형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 중인 아베노믹스 >



3) 국가 경쟁력 제고

○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개선세가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OECD 평균은 물론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시간당 노동생산성 개선세가 매우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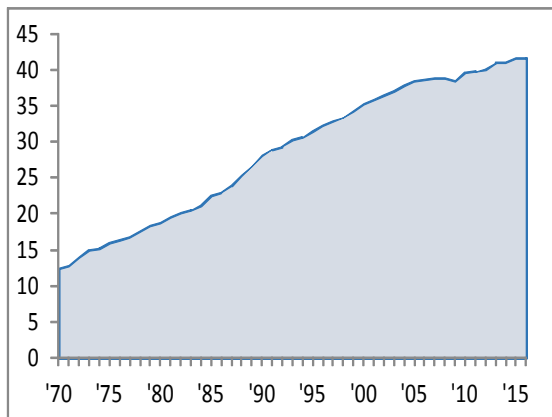
-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41.6달러로 2차 아베내각 출범 후인 2013년부터 4년 간 0.8달러 상승하는데 그침

- OECD 평균은 물론 주요국을 크게 하회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OECD 평균 47.0달러에 비해 5.4달러(약 11.5%) 낮은 수준
- 이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6달러(對 이탈리아, 12.6%) 많게는 22.7달러(對 미국, 34.3%)나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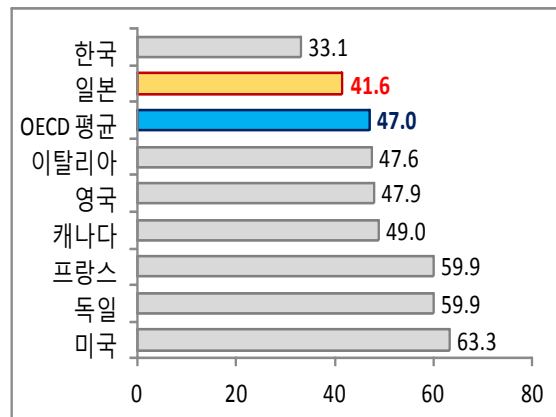
- 이처럼 낮은 노동생산성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의 노동생산성 추이 >  
(시간당 GDP, 2010년 ppp 기준, 달러)



자료 : OECD.

< OECD 주요국 노동생산성 순위 >  
(2016년 기준)



자료 : OECD.  
주 : 시간당 GDP, 2010년 ppp 기준 달러. 2016년은 추정치.

### 3. 시사점

- 4차 아베내각이 생산성혁명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형성 중인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고 디플레 탈출은 더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성 개선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상승은 물론 유지도 어려운 실정
  - 더욱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는 이상 일본경제가 디플레에서 탈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4차 아베내각의 정책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 자극 및 경기 버팀목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로 잠재성장률을 높여 확고한 디플레 탈출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일본과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폴리시믹스를 참고하여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소득 및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첫째, 단기,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이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단기 대중적인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안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도록 정부 내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사후 정책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둘째,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R&D 투자 강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생태계의 조성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있어야 함

- 국가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 법규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협치의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과 같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한편,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정착시키는 것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셋째,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과 후생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 등으로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배가 국민 생활과 후생 수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경기 급변동기 가계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정책의 실효성과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넷째, 노동 투입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과의 시너지를 유도해야 함
- 현재까지의 고용대책들을 종합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부문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 촉진, 각종 차별 철폐, 고령자 노동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 증대를 통한 직·간접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은 물론 투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